

北 미사일 연속 발사에 美 눈덩이 방위비까지...

文정부 외교력 ‘사면초가’... 한반도 프로세스 ‘적신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흔들
분담금 인상, 안보동맹 경시 행보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사면초가를 직면했다는 우려가 팽창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 이어 31일까지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올해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서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움직임을 보인 계기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일본은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정부가 주변국가들로부터 고립된 모양새를 보여준 셈이다.

우선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발사한 발사체 2발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31일 오전 5시6분 및 5시27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단거리 탄



남북미 정상들의 사상 첫 회동이 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성사된 모습. /연합뉴스

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에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최근 남북미가 지향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오전 11시에 열린다.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현재 안보 상황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제원 같은 것들은

한미 정보당국간 분석 중이고,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 유지를 굳이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흔들리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31일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 입에서 우리나라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즉 최근 수출규제 등 한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안보배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차기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할 분담금이 약 50억 달러(약5조9000억원)로 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한미는 협정을 통해 지난 3월 ‘1조389억원’에 서명했으나, 이 서명의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 방위비가 대폭 인상될 것이란 폭

소리가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동맹을 경시하는 행보라는 게 야권의 전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분담금 내용에 대해서 여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한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분담금 대폭 인상’이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나. 정말 우리나라와의 안보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분담금 대폭 인상’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부대변은 “이는 현 정부의 외교력 과도 연관이 깊다”며 “최대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날리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에 더해 백색국가(안보우방국) 제외를 검토 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의 외교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2018년 대비 2021년 입학정원 변화 예상)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21년	증감인원	증감율
대학	317,311	318,114	803	0.3
전문대학	167,464	162,356	-5,108	-3.1
전체	484,775	480,470	-4,305	-0.9

1)대학: 국·공·사립 일반, 산업, 교육대 334교(분교 개별 대학으로 산정)
*자료: 대학알리미(2019.7.24 다운로드) 및 대교협(2019.6월 기준)·전문대교협(2019.3월 기준) 정보공개청구 자료. /출처=대학교육연구소

‘대학 자율’ 정원감축, 사실상 ‘실패’

2021년 대학 입학정원 계획 분석
전문대·지방대학 위주 감축 여전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더니 당초 감축 규모 계획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책적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학들이 정원감축에 자율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평가다.

31일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의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소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은 4305명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2018학년도 대비 -0.9%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대학 기본역량진단 발표 시 권고한 감축인원 1만명의 절반에 그칠뿐 아니라, 당초 2주기 감축 규모로 계획한 5만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학생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정원을 2013학년도 56만명에서 2023학년도 40만명으로 16만명 감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3주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2018학년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입학정원 6만명을 감축했다. 2주기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개정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정원 자율감축 대학을

선정했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할 3주기 정책은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주기 감소폭이 1주기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정원감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주기와 2주기 정책을 통해 감축한 입학정원이 고작 6만5000여명 수준이다 보니 오는 3주기 정책의 정원감축 압박도 그만큼 커질 예상”이라며 “특히 3년여간 10만명 가까운 입학정원을 선불리 감축하려 하면 대학가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를 분석한 연구소 측은 정부가 2주기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당초 교육부는 2주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감축 인원 5만 명 중 3만여 명을 ‘시장’ 즉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솔선’해서 정원을 감축할 이유가 없어 ‘시장’에 의한 감축 규모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학년도 정원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은 대학은 전체 대학의 절반을 넘는다. 198개 4년제 일반대 가운데 173곳이 정원감축 계획이 없었고, 135개 전문대학 가운데 46곳도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았다. 일반대·전문대학 333곳 중 219곳이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국회 운영위 연기... “北 미사일 발사 총력 대응”

여야, 추가 발사에 안보 대응 태세
NSC 회의개최 등 총 십자포화 여전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따른 안보 대응을 위해 31일 예정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 연기는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제안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 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운영위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새벽 북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몇시간 만에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체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연기를 제안했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예정된 운영위원회는 금요일 또는 다음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의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운영위원회 날짜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날짜 협의는 안 됐다”면서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음달 5일 하기로 돼 있어 (국방위 회의) 이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운영위 회의는 자발적으로 연기했지만, 국가안전보장(NSC)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선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수위도 한 단계 올린 상태라 추후 운영위에서의 청와대 질타는 십자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채용 피해야할 유형 1위 ‘트러블 메이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채용 후회’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잘못된 채용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꼽은 반드시 채용을 피해야 할 인재 유형으로 팀 내 동료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를 1위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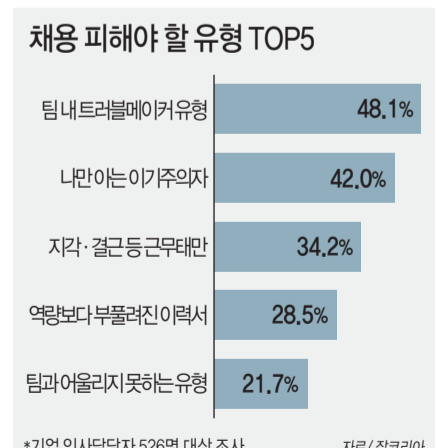
취업포털 잡코리아 인사담당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 71.9%는 “잘못된 채용으로 인해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원들을 잘못 채용한 이유로는 대인문제와 조직 부적응을 원인으로 꼽았다.

31일 설문에 따르면 실제 이번 잡코

리아 조사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은 ‘반드시 채용을 피해야 할 인재유형’(복수응답)으로 ▲다른 팀원들과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48.1%)와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42.0%)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 외에 ▲지각, 결근 등을 밥 먹듯 하는 유형(34.2%) ▲실제 역량보다 부풀려진 이력서(28.5%) ▲조직원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유형(21.7%) ▲직무 적합도가 전혀 없는 유형(18.1%) ▲매사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유형(16.0%) ▲모든 업무가 내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유형(8.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으로는(*복수응답)▲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가 응답률 61.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45.1%)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팀워크(34.0%) ▲입사하고자 하는 의의 및 회사에 대한 관심(31.7%) 등의 순이었다.

/손현경 기자